

한국의 THAAD 배치와 중국의 대응전략

나 영 주 (창원대학교)
(yz08@yahoo.co.kr)



국문요약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논란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였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의 수요를 뛰어 넘는 전략적 자원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와 봉쇄의 목적을 가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한국의 사드 배치 논란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사드 배치 공론화로 발전하자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동시적 이행을 주창하였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과거와는 달리 적극 동참하였다. 한국 사드 배치 논의가 중국에게 불리하게 흐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알리바이 외교 전략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비관세 장벽을 통한 무역 및 통상 보복이 예상되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한중 관계의 악화 속에서도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거듭 천명하고 대북 제재의 레짐을 이탈하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의 대한반도 관리 정책의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사드가 역내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외교적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역내의 군비증강, 서해 방공식별 구역 선포,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협력 강화 등이 예상되는 중국의 대응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사드, 전략적 균형, 미사일 방어 체계,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I. 서론

2015년 한반도의 여름이 남북한의 극단적인 군사 대치로 뜨겁고 힘든 계절이었다면 2016년 한반도의 여름은 전례 없는 무더위와 함께 한중 관계가 사드라는 불별 세례로 악화 일로에 있다. 2016년 새해 벽두에 발생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어 2월 7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한국은 사드(THAAD) 배치에 관해 미국과 협의하는 것을 공론화하였으며, 이후 5개월여 만인 지난 7월 8일 전격적으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 결정하였다. 사드 배치의 공식 결정 이후 논란은 부지 선정, 전자파에 관한 우려, 국회 비준 여부 등의 국내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를 전적으로 반대해 온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한중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경제 제재의 국제적 공조가 순탄하게 진행되어 그 성과를 확보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사드 배치 논란이 빚은 국내외적 문제의 기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있다. 지난 5월 북한은 36년 만에 열린 북한 노동당 7차 당 대회에서 다시 한 번 핵개발과 경제건설의 병진 노선을 확실히 하였으며, 핵보유국으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노라는 호기까지 부렸다.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국면이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로 인한 비상한 한반도 상황을 전환할 계기는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통해 핵무기의 경량화와 소형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왔으며 투발 수단으로서 미사일 역시 끊임없이 개량해왔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이다(윤정원 2016, 12-16).

사드 배치에 관한 논의가 북한 4차 핵실험 이후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국의 사드 배치에 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공개되었다. 그 때마다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에 관해 미국과 “요청한 적도, 협의한 적도, 결정한 바도 없다”는 ‘3No’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분명 사드 배치에 관한 사안이 한미 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공론화한 것은 아니라는 이른 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였던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도발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THAAD 배치 문제에 관해 미국과 협의하는 것을 공론화하였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2월 10일)이 남북한 관계에서 자해적 수준의 정책이라고 할 정도로 강경책이라면 한국의 THAAD 배치에 관한 일련의 논의 과정은 대중국 압박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정제윤 2016).¹⁾

한국으로서 사드 배치 논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전략적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이라는 측면 이외에 중국이 북핵 문제의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줄 것을 원하는 외교적 시그널(signal)도 함축한 다목적 카드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 공론화와 결정은 한국으로서 전략적으로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한국 내 사드 배치에 관한 딜레마적 상황과 논란은 중국의 부상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이기완 2015; Hwang 2015). 중국이 냉전 시기의 중국이거나 미국과의 패권을 다투는 수정주의 국가로 인정하기 쉽지 않은 경제적, 군사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의 정책 선택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거시적으로 한국 내 사드 배치의 논란은 예전 같지 않은 힘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과 경제적 군사적 위상에 부합하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중국의 국제정치 위상 경쟁이 빚어 놓은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사드 배치 정황의 단계론적 발전과 더불어 중국의 대응 전략에 관해 추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관해 중국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해 왔고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한국 내 사드 배치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왜 반대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내 사드 배치에 관해 중국이 어떤 전략적 불리함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며, 향후 사드 배치의 전개 과정에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추론해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는 한국은 왜 사드를 배치하려하며, 미국이 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 하는지 그 의도와 목적을 중국의 입장에서 파악해 보는 것이기도 하다. 연구는 또한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 공론화 및 결정 과정과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어떤 외교적,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인가를 전망해 보는 것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입론 하에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힘의 크기가 서열화 되어 있는 국제정치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국가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면 열위 국가가 원하는 정치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이후 관계에서 명분을 축적하고자 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국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원하는 선호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그에 맞는 보복(retaliation)을 행사할 것이다.

1)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93321 (검색일: 2016. 8. 17.). 미국의 의도이기는 하지만 한국 역시 중국의 대북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전략적 측면에서 사드 배치를 염두에 둔 측면도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군사기술적 측면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가 미·중 간의 전략 균형을 흔드는 대중국용으로 보는 견해는 고영대(2015, 554-565), 郑继永(2015), Liu Chong(2015, 129-153).

Ⅱ. 한국의 사드 배치 논란과 중국의 정세 인식

1. 한국의 사드 배치 논란과 중국의 입장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2014년 6월 한국국방연구원 조찬 강연에서 사드에 관해 이야기를 꺼낸 이후 한국은 사드 배치를 놓고 무수한 논쟁과 논란을 벌였다. 논란은 오락가락 하는 한미 양국의 모호성 때문이었으며, 논쟁은 실제 한국에 사드를 배치했을 경우의 효용성에 관한 것이었다(홍규덕 2015; 박근재 2016). 중심이 짧은 한반도 전장 환경에서 기술적으로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을 막아내는데 효용성이 있는가에 관한 문제, 사드를 배치하고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의 문제, 사드 배치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가의 문제, 사드 배치 시의 환경 문제와 전자파의 위험 문제, 그리고 사드 배치 시 중국과의 관계 문제 등이 주요한 논쟁의 대상이었다. 군사 기술적 측면에서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대공 방위망의 구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의 도입이 효율적인가에 관한 논의가 가장 많은 연구와 논쟁의 대상이었다. 비용의 문제는 어느 정도 진화(鎭火)된 것이 그 유지비용을 미군이 부담할 것이라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새어 나오면서 부터였다. 배치 지역과 전자파의 문제는 초기 논의에서부터 논란이 되었으며 성주 지역으로 배치 결정 이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그 의문과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다.

사드 배치 시의 논쟁에서 민감한 또 하나의 문제는 만약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사드 배치 논쟁에서 핵심은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게 될 경우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중국과의 관계에서 큰 갈등이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현재 통상 교역의 측면에서 한국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는 다름 아닌 중국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제적 우려는 지극히 현실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사드 배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사드 논의와 관련해 안보 문제는 경제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며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다 하더라도 중국의 별다른 압력 행사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정경영 2015, 67-68; 김태우 2015, 17-18).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중국이 외교적으로 한국과의 심각한 불화를 야기할 정도의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을 것이다. 동아시아 정세의 변동에서 한국과의 심각한 대립이 전략적으로 중국으로서도 마냥 이득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후의 한중 관계, 특히 경제, 사회 교류에서 중국의 어떤 보복적 대응이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국제정치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 논란과 연관된 강대국의 갈등은 데자뷔(deja-vu)로 혹은 자메뷔(jamais-vu)로 작용하고 있다. 멀리는 쿠바 미사일 위기가 그렇고 가깝게는

2007년 유럽에서의 미러 간에 불거진 미사일 방어 갈등이 그렇다. 1962년 10월 발생한 미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갈등은 냉전 시기 핵무기를 둘러싸고 벌어진 두 강대국의 기세 싸움이자 패권 경쟁이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케네디의 탁월한 지도력과 결단력 때문에 사건이 무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핵전쟁과 미소 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두 지도자의 내밀한 교류가 있었다(제임스 G. 블라이트 · 재닛 M. 랭 2014). 2007년의 미러 간의 미사일 갈등에서 은 러시아는 미국이 구소련의 앞마당이던 동유럽에 MD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탈냉전 시대의 군사 균형을 깨려는 시도로 보았다. 이에 대해 미국은 유럽의 MD는 불량국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지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이태훈 2007). 미 본토의 MD 기지는 북한, 유럽의 MD 기지는 이란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이었다. 러시아는 만약 폴란드와 체코에 미사일 방어 기지가 들어서면 공격할 것이라고 엄중한 경고를 하였다. 이란의 핵개발과 미사일 공격에 대한 위협이 명목이었지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탈냉전으로 인해 존재의의가 없는 NATO가 확장하면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는 동진 정책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Dean A. Wilkening 2012, 32-33). 유럽에서의 미러의 미사일 갈등은 미국의 새로운 MD 정책의 추진으로 2015년 이란 핵문제의 타결 이후 다시 재연되고 있다(이대식 2015, 181-202). 전략 미사일의 배지로 인한 강대국의 갈등은 위협 인식과 보복적 대응이라는 상호 관계의 특성을 지닌다. 한국의 사드 배치를 전략적 균형의 훼손으로 보는 중국의 입장에서 별다른 보복이나 대응이 없을 것이란 기대는 순진한 것일 수 있다. 러시아역시 한국의 사드 배치를 의심스러운 시각으로 보면서 중국과 적극적 공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출현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중국과 수교한 이래 한국 입장에서 중국을 의식한 외교적 행보를 취해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주권 국가이기는 하지만 국제정치의 위상은 중국에 비해 약소국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거기다가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강화될수록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의 해외주둔미군 기지의 조정(GPR) 과정에서 한국에 주둔한 미군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정책을 입안할 때도 한국은 행여 대만해협이나 동중국해서 발생한 분쟁에 연루될 것을 우려하였는데 이는 곧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때문이었다. 한국으로서는 이런 상황의 출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한미 동맹이 한국으로서는 안보의 초석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주창하는 MD에 편입되지 않고 한국 자체의 미사일 방어망(KAMD)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나 북한의 미사일 공격 시에 선제 타격의 실행을 의미하는 킬 체인(Kill Chain)을 입안한 것도 자주국방이라는 대의도 분명히 포함된 것이겠지만 미국의 MD에 편입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인접국 중국과의 갈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김영호 2010, 162; 평화연구원 2016).

한중 관계의 발전과 더불어 북핵 문제가 끊임없이 한중관계의 또 다른 측면의 발전을 가로 막아왔다고 볼 수 있다. 한중 사이의 관계가 중국이 규정한 외교 관계의 위상에서 꽤나 높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기는 하지만 그 관계는 여전히 경제적, 사회문화적 교류에 그치고 있다. 정작 중요한 군사안보적 교류는 답보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007년 당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취지에 따라 군사 핫라인 설치에 합의하고, 2011년에는 군사부문에 고위급 대화 체제를 수립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으나 전략 대화의 상설화는 아직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비록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의 해결, 한반도의 비핵화를 한반도 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실행하고 있지만 한반도의 동맹중심의 안보 구조가 한중 양국의 군사 안보 분야의 발전과 협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차창훈 2012, 478; 石源華 · 文恩熙 2012, 17-19).

잘 알려져 있다시피 사드는 미국의 MD 체계를 구성하는 요격 미사일 무기 체계이다.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의 종말 단계 상층부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즉 최대 요격 고도가 150Km, 최대 200Km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중심으로 화력 통제 및 통신장비, 레이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드 구성 레이더인 AN/TPY-2는 전진 모드일 경우 최대 탐지거리 2천 Km, 종말 단계 요격용일 경우에는 유효 탐지 거리가 600km 정도로 알려져 있다.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는 요격미사일 자체가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X-밴드 레이더(AN/TPY-2)'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경우 최대 2천km까지 중국 핵심 군사시설이 있는 상하이, 텐진과 다롄 등에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의 발사를 초기단계에서 탐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박지현 2015; 김홍규 2014). 다른 한편 중국이나 러시아가 사드(THAAD)가 한국에 배치되는 것에 우려하는 것은 그것이 미국 주도의 MD 정책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THAAD 배치는 한미일 미사일 방어 체계의 일체화로 작용하여 3국의 군사 동맹 형성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이고, 이에 반발하는 북한이 핵 억지력의 제고와 축적을 가속화하고 저항할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와 동북아는 끊임없는 군사적 충돌, 혼란, 심지어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어가 중국에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曹世功 2015).

박근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사드(THAAD) 배치의 문제는 이제 우호적 한중 관계를 해치는 중대한 외교적 사안이 되었다. 경제적 상호의존과 사회문화적 교류가 밀접한 선린 국가의 지속적 발전에 장애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제 사회적 교류가 깊어질수록 한국은 중국을 의식하는 외교적 행태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 상황에서 나온 지극히 고육책인 것이다. 중국은 한국에서 사드 배치의 논란이 시작된 2014년 이후부터 고위 군지도자를 통해 한국의 사드 배치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한국 측에 전달하였다(박근재 2016,

37-39). 한국의 사드 배치가 공론화되고 난 후 주한 중국 대사 추귀홍(邱國洪)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자리에서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한중관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져 외교적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이귀원 2016). 2016년 4월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 만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관해 처음으로 의견을 나누었는데 별다른 합의점이 없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 소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2015년 9월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할 정도로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공을 들인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의 미온적인 북핵 대응에 대해 적지 않게 실망한 상황이고 시진핑 주석 역시 한국의 사드 배치 공론화에 난감(難堪)하였을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도입에 대해 양가적 감정과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Liu Chong 2015, 140-141).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실질적 대상국으로서 한국이 갖게 되는 불안감과 안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 인식하는 것이 그 하나일 수 있다. 반면에 다른 하나는 구시대적 동맹으로 취급되는 한미 동맹의 굴레에서 헤어날 못하고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선택함으로써 사드 도입을 결정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그 인식의 비중은 후자가 훨씬 강할 것이다. 한반도 정세의 엄중함에서 사드 문제가 비롯된 까닭에 한국이 취한 조치가 불편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한중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저해하는 미국에 대한 지나친 안보적 경사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王俊生 2016, 27-29). 북핵 및 미사일 위기의 악화 과정에서 중국은 한국이 사드 배치라는 카드를 꺼내 든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역시 한국이 꺼낸 수에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 고심은 한반도를 포함한 전반적 동아시아의 정세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

2. 미국의 사드 배치 의도와 동아시아 정세에 관한 중국의 인식

한국의 사드 배치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의 배후에는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고 견제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감추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고 전략적 균형을 훼손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반대의 입장을 거듭해서 밝히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16년 2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외무장관 회담에서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王毅)는 대북한 강력한 제재 조치에 합의하는 대신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염려하였다. 한국의 사드 배치 공론화가 결정되자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항장무검 의재패공; 사마소지심 노인개지'(項莊舞劍 意在沛公; 司馬昭之心, 路人皆知)라는 중국의 고사까지 들어가며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를 현저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 한국의 사드 배치는 미국의 의도에 놀아나는 것으로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가 한국의 안보와 국제사회의 핵 규범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것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안보의 위협이 우월한 관심사가 된 것이다. 2016년 6. 6일부터 시작된 미-중 전략경제 대화는 미국과 중국의 상이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회의였다. 남중국해 문제와 북한에 대한 제재에 관해 상이한 입장이 표출되었으며 무역, 투자와 환율 문제에서 자국의 이익과 관련한 가열된 공세와 방어가 있었다. 이런 갈등의 조짐은 미-중 전략경제 대화를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상그릴라 안보 대화(아시아 안보 회의)에서도 나타났다. 대화에 참석한 에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상그릴라 안보 대화 연설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고립의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및 군사기지화를 중지하라는 것이었다. 미국은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黃巖島)의 매립 공사를 강행할 경우 미국과 관련국들이 행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였다. 미국은 2016년 2월에 양국의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남중국해의 스프라틀리 군도에 소재한 인공섬 좌레론 암초(중국명 華陽礁)에 중국이 고주파 미사일 시설을 건설 중이라 밝히고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 바 있었다. 이 고주파 레이더는 F-22 랩터, F-35 합동타격기(JSF), B-2 스피릿 폭격기 등 미국의 주력 스텔스기를 탐지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중국의 감시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 상그릴라 안보 대화에 참석한 중국 인민해방군 쑨젠궈 부참모장은 남중국해 문제에 연관이 없는 '외부국가'는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역내의 평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자국의 이기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일부 국가의 도발 때문에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을 비난하였다.

실마리가 풀릴 것 같지 않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중 양국은 전략적으로 확실히 충돌하고 있다. 항행의 자유를 앞세우는 미국은 중국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영유권을 선포하고 암초를 매립하여 군사기지화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전략 활동 영역이 축소될 것이 때문이다.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을 연결하는 중국의 반접근 및 지역 거부(A2/AD) 전략의 실제 거점으로서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거점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전략 균형을 해치며 자국의 전략 안보를 훼손할 것으로 본다. 구두로 상호 맹비난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중 간에 꽤나 갈등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16년 5월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 및 섬의 군사기지화에 대응하여 세 번째 항행의 자유의 작전을 감행할 때 중국 역시 무력시위로 이러한 작전에 대응함으로써 공중에서

2) 王毅谈美拟在韩部署“萨德”反导系统. 人民网(2016. 2. 13.). 출처: <http://sn.people.com.cn/n2/2016/0213/c358036-27721346.html> (검색일: 2016. 2. 14.).

3) CSIS "中, 남중국해 화양자오에 강력한 레이더 시설 건설 중...말라카 해협 감시·통제 가능." 중앙일보(2016. 2. 23.).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19614979> (검색일: 2016. 5. 21.).

양국의 근접 비행으로 인해 전투기가 충돌할 뻔한 사건이 있기도 하였다.

해상 수송로의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남중국해에서 미중이 갈등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부상한 중국의 자의적 행태에 대한 일종의 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중국의 영토였음이 분명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암초인 섬들을 가공하여 군사기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해양 영토의 중요성과 함께 핵심적 이익으로서 전략적 요충지를 주권 차원에서 보호하겠다는 명분이며 실효적 지배를 확실히 하겠다는 의도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과의 군사, 외교적 협력에서 자국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국가에 우호적 행동을 보여주고 있으며, 양국은 개별국가들을 자국 세력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2016년 5월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참석하기에 앞서 베트남을 방문해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를 해제하였다.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비슷한 시기 미국의 외교 행태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태국과 육상 및 해상에서 연합 훈련을 실시하였다.

2016년 5월에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는 중국이 남중국해 등에서 군사 거점화를 시도하는 행위를 견제하는 내용의 정상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중국은 회의를 주최한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판하면서 ‘항행의 자유’가 ‘횡행(橫行)의 자유’일수는 없다며 항행의 자유를 핑계로 중국을 모함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웠다. 남중국해의 인공섬 조성은 중국의 주권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일이라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 활동이라고 주장하였다(홍제성 · 이준삼 2016b).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16년 4월 제4차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국가 안보와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은 사드는 방어적 무기일 뿐이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용도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구자룡 · 이승현 2016). 미국은 중국에 사드의 한국 배치가 결코 중국을 위협하는 용도가 아니라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국이 우려하는 사드의 구성 요소인 탐지 레이더 AN/TPY-2가 대북한 용도일 따름이며 중국의 전략 기지가 밀집된 지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중국에 설명하기를 원하나 중국은 귀담아 듣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의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노효동 2016).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중국은 개혁 개방의 실질적 성과를 1차적으로 마무리하는 소강사회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너머의 ‘중국의 꿈’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내외부적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신창타이’ 상황을 인정하나 성장 동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비전으로서

‘일대일로’를 주창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를 성공적으로 진수시켰다. 미국과 신형대국관계를 주장하고 나섰으나 미국의 중국 대우가 섭섭한 듯하다. 대외적으로 중국이 도광양晦(韜光養晦) 정책을 너무 일찍 버리고 주동작위(主動作爲)를 너무 일찍 시작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 및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그 사례가 남중국해의 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이런 현상변경적 행동에 대해 미국은 제지를 하는 것이며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이런 정책에 대해 중국은 포위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 내의 사드 배치 역시 미국의 전 세계적 MD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한 구실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내에 배치된 MD의 자산으로서 X-밴드 레이더와 같은 능력을 가진 무기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어 그 능력이 보장될 경우 중국의 동북 지역과 발해만 지역에 배치된 중국의 전략적 자산인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미사일의 전력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Liu Cheng 2015, 138). 분명히 핵 역지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인 것이며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미국의 공격적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가 결국 미국의 아시아 균형 정책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의 전력 자산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Ⅲ. 한국의 사드 배치 공론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

1. 한반도 문제의 해법 제시

북한은 4차 핵실험 이후 한 달여 만에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하면서 국제사회를 들끓게 만들었다. 한국은 곧바로 미국과 사드 배치에 관해 공식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는 것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언급하기를 조심스러워했던 사드 배치를 정책으로 공론화한 것이다.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는 한국에서 사드 배치를 공론화 이후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동시적 진행을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하였다(杨依军 2016). 중국의 이러한 행태는 종래의 북핵 실험 및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과는 다소 다르게 좀 더 적극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피력한 것이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중국의 언급은 사실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중국은 북한의 거듭된 핵 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6자회담의 복원을 주장하였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불신으로 현실적으로는 복원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대화 채널이 가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의 안보 위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로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 북핵 문제의 원천적 해소는 북한 체제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 체제의 보장은 한국 전쟁의 정전 체제를 종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북미 간에 외교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2차 핵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6자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2005년의 9.19 공동성명에서 개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 로드맵에 관해서는 합의한 바 없으며 이후 관련국의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박종철 2016, 1-4).

중국으로서는 이런 해법만이 북한의 체제 위협과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국과 미국의 북한 핵에 대한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다. 북한과 한국 및 미국이 얼마나 호응하는가에 달렸지만 중국으로서는 여전히 북핵 문제의 관련 당사국들이 문제를 풀어내는 다자간 회담 방식이 북핵 해법의 비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나 핵실험은 ‘중국의 꿈’을 위해 전진하는 중국으로서는 하등에 이득이 될 것이 없는 사건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로켓 실험을 시도할수록 동아시아 역내의 군비 경쟁은 심화될 것이다. 동북아 안보불안의 최대 요소인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이 동북아에 개입할 수 있는 빌미가 되며,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다. 최근 집단적 자위권의 법제화를 마련한 일본에게는 무력행사의 정당성에 관한 원인을 제공할 것이다. 한미일의 동맹적 결속은 더욱 공고화될 것이고 군사협력은 가속화될 것이다. 북한 문제로 인해 냉전구도의 재생은 중국으로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에서 비롯되는 안보 불안의 ‘북한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미국에게 동아시아 역내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되는 셈이다(성연철 2015).

핵심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후 평화체제로 진행할 것이냐, 평화체제의 수립 이후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북한 핵 및 한반도 평화체제에 접근하다보면 또 다시 성과 없는 대화만 반복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왕이 외교부장이 언급한 것은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라는 측면에서 기술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2016년 2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병행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하면 북핵과

한반도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현실 가능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제시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책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대응으로 임시방편으로 내어 놓은 처방은 아님에 분명하다. 중국과의 경제 및 외교적 관계에 공을 들인 한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과의 외교적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엄중해가고 있는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의 근본적 원인이 북한 체제의 안보 불안에 있다는 것을 관련국들이 인지하고 현상적인 핵 위기로 표출되는 사안의 근본적 처방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동시에 이행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다. 그간 북한과의 협상과 대화국면에서 거듭되는 약속 파기와 위계를 경험한 미국으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제안이며, 지속적인 북한의 핵 공갈 상황으로 볼 때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확실하지 않은 이상 대화를 속개할 수 없다는 한국에게는 즉각 구미가 당기는 제안은 아닐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비록 대북 제재 국면에서 동참하기는 하는 것이지만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잃지 않으면서 북한을 결코 방기할 수 없고, 방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북 제재 국면에서 제재는 수단일 뿐 한반도 문제 해결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 관련국의 대화 복원이 시급하다는 중국의 일관된 주장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북한의 위기 상황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축적하는 의미도 있다. 개별국의 상황에 대한 선호에 상관없이 관계국의 신뢰와 협력이 보장된다면 중국의 제안은 원론적으로 무의미한 것이 결코 아니다. 북핵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제재와 압박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2. 북핵 문제의 책임론과 대북 제재의 알리바이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경제 제재에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미국, 일본 등과 같이 독자적인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북한에 마지막이라고 경고하는 듯이 제재에 엄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런 국면은 충분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중국으로서는 북한 핵문제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적 알리바이(alibi)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일어나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논란을 반영하여 이전과는 다른 엄중한 대북제재를 실시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중국으로서 사드 도입 상황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수순으로서 북한의 제재 국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열성을 보여줌으로써 이른 바 알리바이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사드 도입의 현실화에 대비한 중국의 명분 축적용으로도

해석 가능한데 이른 바 중국이 알리바이 외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발생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관한 논의가 한창일 때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 부장 사이에 북핵 문제의 악화에 관한 책임 소재를 두고 설전이 오갔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이 소극적으로 행동해 온 것이 북핵의 위기를 조장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미국은 북한의 생물학적 수명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명줄을 확실히 끊는 경제적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오만한 핵실험이 거듭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반면 북핵 문제를 악화시킨 것은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미국 탓이라고 중국은 주장하였다. 중국은 실질적 문제 해결의 관건을 가진 미국이 제재만을 일삼고 북한과 대화를 기피하였기 때문에 북핵 위기가 가중된 것이라고 하며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에 대해 반박하였다. “6자회담이 중단된 뒤 유관 국가가 제재·압력을 강조했고, 조선이 핵실험을 시작했다. 조선은 확실히 유관 국가의 뺨을 때린 것이 맞고, 그 뺨이 누구의 것인지, 누군가는 확실히 알 것”(성연철 2016)이라며 북한 핵문제의 악화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미중 간의 책임론 공방에서 보듯이 지금의 북핵 문제에 중국이 책임을 자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핵문제를 예전과 같이 대응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문제가 야기하는 한반도 정세 불안 및 이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결집하는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한미일의 군사적 동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였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내놓은 한국의 사드 배치 공론화 정책이 궁극으로는 북핵 문제로 야기된 중국의 국익 손실 상황이 된 것이다. 공식, 비공식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은 분명하게 사드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북핵 상황이 악화되는 국면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를 막을 명분은 줄어들게 된다.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이 사드 배치 공론화를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억제 정책으로 내놓았을 때, 이것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지만 중국도 염두에 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카드로서의 비중도 무시할 수 없었다.

대북 제재의 초기 단계에서 중국의 참여는 꽤나 엄중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⁴⁾ 중국 상무부는 대북제재 결의안이 도출된 약 한 달 뒤인 2016년 4월 5일 구체적인 결의 이행을 실시하여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 25종을 발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 2016년 4월 교역 통계자료에 근거한 4월 북·중간

4) Hurting in Pyongyang-As Seoul and the U.S. get tougher, China may be enforcing sanctions. The Wall Street Journal(May 15, 2016.).

출처: <http://www.wsj.com/articles/hurting-in-pyongyang-1463095192> (검색일: 2016. 5. 21).

전체 교역액은 4억2천941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0.54% 줄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1억 6천 138만 달러(약 1천 922억 원)로 2015년 4월에 비해 22.35% 급감했으며,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2억6천800만 달러로 2015년 4월에 비해 1.53% 감소했다. 북한의 대중 수출 주력품목인 석탄 수출액은 7천 227만 달러로 전년인 2015년 동기간보다 38.3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홍제성 2016). 2016년 6월 초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쑨젠궈(孫建國) 부참모장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 입장을 피력하면서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북 제재에 대해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정진 2016).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 배치는 설사 군사적 실효성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층 방공망을 구성하는데 유의미한 대안이였다(이상현·정재홍 2016, 16-17). 사드 배치에서 논란의 핵심은 군사안보적 관계 이외의 경제적, 사회 문화적 교류에서 그 관계의 의미가 점점 중후해지고 밀접해지는 중국과의 관계 문제였다. 한국으로서는 사드 배치 이후 중국과의 제반 관계에 미칠 파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가 중국의 국가 이익과 관련된 문제라면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한국의 국가 안보와 결부된 이익이다. 이렇게 양국의 국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사드 배치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최소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과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되었다. 북한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외부에서는 북한 체제의 생존과 내구력에 직접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로 중국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명분을 축적할 필요가 있었다. 독자제재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 엄정하게 참여하는 것이 명분 축적의 우선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북한의 핵개발 의지와 노력을 좌절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드 배치의 반대에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일종의 외교적 알리바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김정은의 구두 친서를 전달하였다.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국면에서 북한과 중국고위 지도자의 공식적인 만남이었다. 리수용을 면담한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언급하였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관 당사자들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기 희망한다고”고 말했다(홍제성·이준삼 2016a). 북한이 핵 개발과 경제건설의 병진 노선을 추구하는 한 북중 교류의 제한은 분명할 것으로 보였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경제 제재의 성과가 한국의 사드 배치와 연계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상당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고 제재 국면의 알리바이를 어디까지 보여주
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였을 것이다.

IV.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대응 전략

1.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과 한중 관계

사드 배치 결정이 예상보다 일찍 나왔다. 한미 당국은 중국의 남중국해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이 나오기 전인 7.8일 전격적으로 사드를 배치 결정을 공표하였다.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이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특히 무수단의 고각 발사 도발이 사드 배치 결정을 재촉한 측면이 있다. 한편 한미가 내심 배치를 결정해 놓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발표 시기를 찾다보니 남중국해의 판결 전으로 배치 결정 발표를 선택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정치 일정 때문에 배치 결정을 조금 이르게 했을 수 있다. 미국은 2016년 말 가장 중요한 대선이 있고 어쨌든 최고 권력은 바뀌게 된다.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던지 시급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가 발생하면 사드의 실전 배치는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 역시 2017년 말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사드 배치 문제가 어떻게 귀결될지 알 수 없다. 여야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사드 배치 논의가 무산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미의 안보론자들이 서둘러서 사드 배치 결정을 서두른 정치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은 온통 사드 정국으로 빠져 들었다. 본격적으로 사드의 군사기술적 효용성이 다시 재연되기 시작했고 부지 선정과 전자파 문제로 그야말로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사드 배치라는 국가의 중대한 사안을 의회의 동의 없이 행정적 처분과 절차만으로 가능하냐는 논란도 제기되었다. 국가안보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비싼 공부를 사드 배치라는 수업료를 내면서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 배치 부지가 선정되자 정작 한국의 사드가 수도권 방어는 하지 못한 채 미일의 미사일 방어에 기여함으로써 철저하게 MD체제로 편입되고 있다는 주장이 비등하였다(김창수 2016; 김종대 2016; 최중건 2016; 김연철 2016). 최초의 부지 선정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자 제3부지론이 등장할 정도로 국가 안보 이익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 결정에서 조급함, 준비 미숙, 민주주의 원칙의 실종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여전히 시민들을 계몽과 계도의 대상으로만 취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가의 안전과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책이 정작 시민들을 결정으로부터 소외시키고 홀대한 상황이 된 것이다. 사드 배치 결정의

논란 속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향후 한중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중요한 주제로 떠올랐다.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 발표되자 중국 외교부는 강렬한 불만을 표시하고 사드 배치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다. 국방부 역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국가의 전략적 안전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는 담화를 내놓았다. 외교부장 왕이는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한국의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방어 수요를 초과하는 것”으로 “우리는 한국 친구들이 사드 배치가 진정으로 한국의 안전, 반도의 평화안정 실현, 반도의 핵문제 해결에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냉정하게 생각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연합뉴스 2016/07/09).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 러시아 및 주변국에게 사전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관영 언론은 연일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비난하였다. 한중 관계가 수교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급전직하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지난 2015년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상에서 양국의 최고 권력자가 우의와 호혜를 다짐하는 모습은 기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중국의 한 매체는 한국의 사드 배치 논리의 일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 (한국측의 논리) 중국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한다. 핵 위협을 받는 한국 처지에서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중국측의 반박 논리) 우리도 묻고 싶다. 한국은 어떻게 중국이 미국의 위협을 받는다는 관점에서는 생각하지 않는가? 그리고 한국 정부도 인정하듯 사드는 수도권 방어에도 소용이 없는데 한국에 의미가 그렇게 큰 것인가?...”⁵⁾

사드로 인한 한국과 중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관한 생각이 현저하게 어긋나는 대목이다. 중국은 현재 미국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날로 위중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대북 역지에 별 소용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양국 모두 안보 현실의 평가에서 자국중심주의적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형식 논리에는 문제가 없지만 대국 의식이 짙게 배어 있다. 한반도라는 소지역체제의 전략 균형은 도외시한 채 미중의 전략 균형 훼손이 훨씬 더 위중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안보 현실을 계량화할 수는 없으며 안보 불안의 체감 긴박성으로 보자면 한국이 훨씬 더 위중한 안보 상황이 아닌가? 한반도 안보 상황도 무균실의 진공 상태가 아니다. 백번을 양보해 사드가 정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북한 핵과 미사일의

5) 社評：請欣賞韓媒就“薩德”的8條奇談怪論，環球時報(2016，07，22.)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6-07/9209717.html> (검색일: 2016. 7. 23.)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악화하고 있는 한반도 소지역체제의 전략균형의 대안은 그것이 전력 증강이든 대화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중국 역시 미국의 위협에 화전양면의 전략을 다 동원하고 있지 않은가?

“... 중국은 10년 넘게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reasonable security concerns)를 미국이 수용해주면 북한도 핵 포기예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왔다. 북한 핵과 미사일의 1차 목표가 한국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뿐 아니라 한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의 우려를 해소할 출구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방어 노력을 중국이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송민순 2016).

사드 결정 이후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속되었고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로 낙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중국의 관영매체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를 동원하여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사드 배치 결정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급기야 한국은 청와대가 나서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합리화하는 중국의 주장이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사드 배치 결정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인 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 배치도 필요 없을 것”이라며 한국의 순수한 방어적인 조치를 왜곡하지 말 것을 중국에 주문하였다(연합뉴스 16/08/07).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규탄 성명까지도 사드 배치를 이유로 무산시켰으며, 오히려 사드 배치 결정이 유엔 안보리의 북핵에 대한 협력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그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돌렸다.⁶⁾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공식, 비공식적인 경제적 보복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른 바 한류로 불리는 한국 가요의 공연이나 드라마 방영 및 합작이 제한되고, 예약된 중국 단체 관광의 취소되고 있으며, 상용 비자 발급의 제한 등으로 경제적 보복이 구체화되고 있다. 향후 중국은 직접적인 무역과 통상에서의 보복보다는 비관세 장벽이나 민족주의 정서 등을 활용하여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WTO 회원국으로서 한국과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높은 중국이 공개적인 경제적 보복 조치를 선택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검역과 통관 등에 대한 심사 강화 조치 등의 비관세 장벽의 수단을 이용하여 교역을 제한할 수 있으며, 중국내 민족주의 정서를 이용한 한국제품 불매 운동 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2016, 8).

6) 社評：“薩德”冲垮了安理会围绕朝核的团结. 环球时报(2016. 08. 11.).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6-08/9292217.html> (검색일: 2016. 8.1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지난 7월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과시하며 한국의 사드 철회를 요구하였다. 사드 배치의 상황에 따라서 대북 경제 제재의 공조가 이완되거나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중국은 북한 핵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는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이행도 충실히 실행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하였다(연합뉴스 16/07/25). 중국의 대한반도 관리 정책에서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사드 배치로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모색하고 싶으나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의 원칙 때문에 북중 우호 관계의 설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대열을 이탈하기에도 전략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병행 추진하는 자국의 한반도 문제 해법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연합뉴스 2016/08/15).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나 중국은 큰 틀에서의 대북 제재를 깨지 않으면서 사드 배치 반대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2. 향후 중국의 대응 전략 전망

비록 한국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고 그것이 분명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라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자위적 조치라고 하더라도 중국은 미국의 사드 배치 의도를 충분히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 언급 바와 같다. 미국의 한국의 사드 배치는 그것이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보호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다층방어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를 하더라도 중국은 그것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봉쇄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북한 핵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른 바 사드 배치와 대북 제재 국면의 논란이 무위로 끝나 사드 배치가 한국에 실제로 진행된다면 중국으로서는 이런 전략적 균형의 '붕괴'를 복구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적 시도를 전격적으로 혹은 시나브로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괘씸한' 한국에 대한 즉자적 대응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으로 전략적 균형을 회복하거나 우위를 확보하려는 군사적, 외교적 행보를 취할 것이다. 사드라는 군사적 자산이 동북아 주요국의 군사적 갈등과 협력, 대치 전선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더군다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한중 관계의 악화 속에 한국이 2020년대 중반쯤 새로이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세척에 SM-3를 장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잘 알다시피 SM-3는 미국의 MD 체계 중 해상에서 운용되는 요격미사일이다. 사드보다 더 긴 5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요격 고도도 150-500km나 된다. 만약 SM-3가 도입되면 지상과 해상에서 다층적인 방공망을 구축함으로써 좀 더 확실한 대응체계를 갖추게 되는 셈이나 미국의

MD 편입 논란이 지속될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내에서는 벌써부터 한국의 미국에 대한 지나친 경사 현상으로 비판하고 있다(马兆 2016).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가까운 시기에 해결되지 않는 한 한중 사이의 전략적 갈등 상황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사드 배치의 결정으로 양국의 친밀감의 강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경제 교류의 활성화가 제한되고 있다. 사태가 악화되면 한중간의 묵혀 있던 역사 분쟁, 이어도 분쟁 및 서해의 배타적 경제 수역 획정에서 양국의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안 이외에도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로 훼손된 전략적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첫째,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는 전역(戰域)의 전력 증강에 돌입할 것이며 핵 능력을 고도화할 것이다. 당연히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는 더욱 가중 될 것이며, 한반도의 사드 배치에 관해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한 러시아 역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하에 핵능력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이는 핵무기 선진국들의 핵잠축이 아닌 핵 군비 증강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미러 간의 핵군축 프로그램은 잘 작동되지 않을 수 있으며 미중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협상은 타협이 더욱 더 요원해질 것이다. 남중국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중국해 상황을 영유권 분쟁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은 사드 배치를 내줄 경우 핵심이익으로 간주되는 남중국해에서 더욱 더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는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 미, 일의 군사정보 공유는 강화될 것이며 한국 내의 일본 거부 정서로 인해 지체된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하여 손실되었다고 생각되는 그들의 전력 자산을 보충하는 형식의 군비 증강을 꾀할 것이다(Zhang Yi 2016).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동북아에서 군비 증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태평양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끊임없이 한국의 사드 배치 및 중국을 한 시간 내에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hypersonic glide missiles)의 개발로 중국의 억지 전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Julian Borger 2016). 한국의 사드 배치 공론화 과정에서 중국의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핵잠수함은 은폐성과 생존 능력이 가장 우수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을 뺀 나머지 4개국은 모두 배치하고 있다. ... 중국이 핵잠수함 상시 배치를 하는 것은 필연이다. ... 중국의 핵무기 수량이 미국·러시아와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우리는 국가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핵 능력을 증가시킬 충분한 정당성이 있다. ... 대국 간에 역량 차이가 클 때보다 균형이 잡혀있는 것이 평화 실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한다. ...중국 대중은 중국의 핵무기가

숫자는 더 많고, 생존 능력은 더 믿을 수 있으며, 방어력은 더 첨단이 되기를 바란다. ...” 7)

미국의 중국에 대한 위협이 마치 냉전시대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중국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2차 핵 공격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이미 중국은 이런 전략적 무기 개발에 공을 들여왔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사거리가 8천km에 이르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쥐랑(巨浪)-2(JL-2) 12발을 탑재할 수 있는 진(晉)급 094형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15, 347). 쥐랑-2를 태평양에서 발사하면 미국 50개 주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에 사드 배치 이후 전략 미사일을 더욱 보강하거나 강화할 수 있으며 그 타겟으로 한국의 사드 배치 지역을 포함할 것이다. 이미 중국은 태평양 상의 미국령 전략 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했거나 개발을 거의 끝냈으며, 이 가운데 ‘동평-26’(DF-26)이 위협적이라고 미국은 평가하고 있다(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15, 347). 중국 본토에서도 괌⁸⁾ 타격이 가능한 첫 번째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로 ‘괌 킬러’ 또는 ‘괌 특급’(Guam Express)으로 불리는 DF-26은 2015년 9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70주년 전승절 기념대회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향해 중인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IRBM ‘동평-21’(DF-21, 사거리 900~1천500km)의 개량형인 DF-26은 실전 배치된 포대 숫자가 아직은 많지 않으나 유사시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평가되고 있다. DF-26은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 모두 장착이 가능하고, 이동식발사 차량(TEL)을 통해 지상에서도 항공모함 전단에 대한 공격 능력도 갖췄다. 또한 중국은 사드 체계를 구성하는 AN-TPY/2 레이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미사일의 다탄두화(MIRV) 및 극초음속활강비행체(hypersonic gliding vehicle)인 DF-ZF의 실전 배치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Ian Armstrong 2016).

중국은 또한 남중국해 문제로 인한 미국과의 대치 국면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 이후 동북아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쟈(殲)-20을 실전 배치하여 적극 활용할 것이다. 쟈-20은 미국의 현역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의 라이벌로 거론되는데 스텔스 성능에 공중급유를 통해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고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첨단 전투기로 지난

7) 社評：战略核潜艇值班将增加中国安全. 环球时报(2016, 05, 28.).

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6-05/8984011.html> (검색일: 2016, 5, 29).

8) 괌에는 5천여 명의 미군과 핵잠수함(4척), B-52 전략폭격기 비행단 등이 고정 배치되어 있다. 한반도와 남중국해 등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긴급 출동을 위해 최신에 전폭기들도 순환 배치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DF-26 등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포대도 배치해 놓고 있다(김선환 2016).

2011년 1월 11일 첫 시험비행에 성공하며 처음으로 시제기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또한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SU-35를 J-20이 양산체제에 돌입할 때까지 실전배치하여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 SU-35는 미국의 5세대 전투기 F-22 랩터보다 엔진이나 레이더 성능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15년 러시아로부터 사거리 400km 이상의 S-400 '트라이엄프(triumph)' 지대공 미사일을 수입하였다. 6개 대대 운용 규모의 36대의 이동식 발사대(TEL)와 레이더 등 지원 체계와 함께 도입하여 실전 배치하였다. S-400은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에서부터 B-2 폭격기, F-117 폭격기, F-35 전투기 등 레이더에 거의 걸리지 않는 스텔스기와 전술 탄도미사일까지 파괴할 수 있다. 또한 S-400은 한꺼번에 100개의 공중 표적을 추적할 수 있으며, 동시에 6개의 표적을 격추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S-400 지대공 미사일의 실전 배치로 한반도, 대만, 남중국해 등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미국 전투기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미국과 관련 우방국의 지원 활동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Timoth R. Heath 2016). 중국은 이미 7월과 8월에 서해 및 동해 공해 상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비한 군사훈련으로 추측되는 공중 훈련과 해상 훈련을 전개한 바 있다.

둘째, 중국은 지난 2012년 동중국해의 다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로 일본과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간 이후 2013년 일방적으로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해 관련국가인 한국, 일본, 대만으로부터 반발을 산 바 있다.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있는 이어도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한국 방공식별구역 일부가 중국과 겹쳐 논란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과 인공섬 건설에 따른 관련국들의 반발, 특히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앞세워 관련 도서의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지역은 중국으로서는 해양굴기를 확립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서 중국의 핵심이익에 해당하는 곳이다.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심해지자 중국은 이곳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중국의 피포위 의식이 강화되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Minnie Chan 2016). 중국은 지난 2016년 5월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7차 전국인민방공(防空)회의에서 이른바 '인민방공' 사업을 "국가의 대사이자 국가의 장기적 전략"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은 "군과 정부, 민간이 합심해 국가적 전략인 '방공시스템' 발전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야 한다."며 영공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王经国 · 张宝印 2016).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해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에 손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중국으로서는 준비해 놓고 만지작거리고 있는 카드이기는 하지만 동북아 정세가 사드배치로 불리한 국면에 처했다고 생각되면 동중국해까지 임의적인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드 배치가 실행될 경우 서해상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외교적으로는 사드배치에 중국과 공감하여 적극 반대 입장을 개진한 러시아와의 군사적, 외교적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이미 러시아와는 2000년대에 들어와 상하이 협력조직(SCO)을 동양 판 NATO로 발전시켜온 긴밀한 내력이 있으며,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2007년에 빚어진 유럽판 MD 구축에 대한 러시아와 미국 및 나토국 간의 갈등을 학습한 바 있다. 2016년 4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러시아에서 진행된 중국, 러시아, 인도의 외무장관 회담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중국과 러시아가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공동으로 수호”하는데 입장을 같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국의 사드 배치가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고 있다는 데에 대한 양국의 공감으로써 러시아 역시 한국의 사드 배치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국의 사드 배치가 현실적으로 진행될 경우 동북아 정세에 한발 비켜서있는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정세가 연출될 수 있다. 이는 군사, 외교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전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시킴으로써 세계 정치에서 미국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흐드는 공조 세력이 될 것이다.

한편 북중 관계의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이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면담한 것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실행에 옮기면 북중 관계가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북 제재 국면에서 중국은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 으로 지정하고 북한의 국제금융 거래를 제한한 것에 대해 특정 국가의 독자적 제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미국의 전면적인 대북 압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하였다. 중국이 안전보장 상임이사국으로서의 대북 제재에 관한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지만 미국의 국내법에 근거해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제재가 한반도의 안정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유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좌절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제재이기 때문에 대화로써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중국의 이런 제스처는 중국이 다른 대안이 없는 까닭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천명한다면 언제든지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과 완전하게 등을 돌릴 수 없는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향후 동아시아에서 미중의 긴장이 증폭될 경우 북한은 중국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지용(鄭繼永) 상하이 푸단대 교수는 최근의 리수용의 시진핑 면담 국면을 ‘중국식 병진 전략’이라고 분석하였다. 중국이 북한의 병진노선을 문제시 하여 북한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지도 않겠지만 묵인하지도 않는 중국식 ‘핵문제 해결과 북-중 관계강화 병행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이제훈·김외훈 2016). 사드 배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한반도 상황이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미 동맹 뿐 아니라 한미일의 군사적 공조가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핵개발이 여전히 관계의 발목을 잡겠지만 사드 배치에서 미국의 의도와 한국의 선택에 대한 대응으로써 대북 정책의 국면 전환과 함께 북중 관계 개선을 적극 모색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한반도 정세가 전개된다면 사드 배치로 인해 군사적, 외교적으로 남방 동맹과 북방 동맹이 대립하는 구도가 강화되면서 긴장 정세가 지속될 수 있다(Sangkeun Lee 2015).

V. 결론 및 한국의 대응 방향

한국의 사드 배치 논란 초기 단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공론화 단계, 전격적인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국면에서 이에 대한 중국의 인식, 입장, 전략적 대응에 관해 살펴보았다. 사드 배치 논란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관해 줄곧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한국의 사드 배치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단순히 대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차원을 넘어 동북아에 미국의 MD 체제를 본격 가동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됨으로써 사드 운용 과정에서 한미일의 군사동맹 체제가 강화되는 구도를 만들어 대중국 봉쇄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이는 그 동안 한국이 보여주었던 미중 사이의 균형외교가 사드 배치로 인하여 미국 경사의 편향외교가 되는 것이며 이럴 경우 중국으로서는 우호적인 선린국을 잃는 외교적 손실로서 계산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로켓 발사 이후의 사드 배치 공론화 단계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적 공조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중국이 애써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하였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의 해법으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동시적 진행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사드 배치 논의가 발전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으로서 알리바이 외교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포함하는 한반도 문제에서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사드 배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적 대응이었다. 외교적 측면에서 대북제재의 국제적 공조와 더불어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동시적 모색을 주창함으로써 한국의 사드 배치에 관한 공론화가 중국에게 불리하게 흐르지 않기 위해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정치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국가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면 열위 국가가 원하는 정치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열위 국가의 선호가 국가의 전략 이익을 동반하는 상당히 심각한 안보 의제일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럴 수 있다는 입론으로 중국의 대응을 해석해 보았다.

한국은 중국을 포함한 대북 제재의 국제적 공조 결과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왕 대북제재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한 마당에 그 결과와 북한의 대응을 보고 배치 결정을 해도 문제가 없을 일이었다.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의 폐해와 한국의 배덕적 행위에 대해 극렬하게 공격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여러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류를 주도하는 드라마, k-pop의 방영 및 공연을 제한하고, 출입국 및 상용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소식이 있으며 비관세 장벽을 통한 무역 거래의 제한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중 수교 이래 최악의 한중 관계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중국으로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차에 걸쳐 공식적으로 표명해 온 사드 배치의 철회가 무시되었다는 것에 분개하고 있다. 상대적 우위에 있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국가의 선호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상대적 우위 국가의 선호가 무시되었다고 생각되면 그에 따른 보복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상대적 우위 국가의 선호가 핵심 이익에 가까울수록 더욱 더 그럴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 핵심이익의 침해라고 표명하지는 않았다. 향후 그 보복이 어떤 부문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는 더 지켜보아야 한다. 주로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하는 것에 집중되겠지만 안보 사안과 관련되는 저항도 분쟁의 야기도 보복 행위의 하나로 선택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제반 보복 조치와 더불어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로 훼손되었다고 생각하는 전략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할 것이다. 사드 전력에 대응한 군사전력의 강화, 서해의 방공식별 구역 선포, 한미일의 군사동맹 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북·중·러의 전략적 결속 강화 등이 실행될 것이다.

한국에게 중국은 공존 번영해야 할 강대국임에 틀림없으며, 중국에게 한국은 친성혜용(親誠惠容) 외교의 최우선 대상국임에는 분명하다. 지정학적인 운명과 더불어 밀접해가는 경제적 관계와 사회문화적 교류를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다. 사드 배치의 문제는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적 방식에 의한 배치 철회 결정 이외에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반복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중국이 이를 모를 수 없다. 일시적으로 한중 관계에서 냉기류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실용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준비도 필요하다. 사드가 필요 없는, 핵무기가 필요 없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우선적으로 현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서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해 남북 간의 대화 정국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전략 균형을 맞추기 위한 군사적 대비태세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시기의 대화의 복원은 한반도 문제의 경색을 풀기 위해 더 없이 중대한 사안이다. 타국이나 제3자가 개입하여 마련한 자리가 아닌 남북이 주도하여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합의의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핵과 사드 문제로 뒤틀린 한반도 정국의 경색을 풀어낼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임에 틀림없다. 적절한 시기 남북 대화의 복원이 그 첫걸음이다. 둘째,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동시적 이행에 관한 논의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북미 간 신뢰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사안의 선차성을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한반도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다. 중국의 제안에 공명하고 중국과 공조하여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국의 한반도 문제 해법 제안에 공명하고 주동적으로 공조함으로써 사드 배치의 과도기적 상황을 이해시키게 되면 경색 국면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을 설득시키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 지난 2월 미국의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의 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비핵화만 이룰 수 있다면 사드는 필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 고영대. 2015. 중국 겨냥한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 미·중간 전략 안정 흔들기. 창작과 비평. 43(3), 554-565.
- 구자룡·이승현. 2016. 시진핑, 오바마 면전서 '사드 안돼'... 美 '北도발 대비 방어용.' 동아일보(4. 2.). 출처: <http://news.donga.com/rel/3/all/20160402/77352014/1#> (검색일: 2016. 5. 23).
- 김선한. 2016. 중국, 태평양 상 미국 전략 섬 광 타격 미사일 위협 증가. 연합뉴스(5. 12.).
- 김연철. 2016. 체코는 어떻게 MD를 철회했나? 한겨레(8. 22.).
- 김영호. 2010. 탄도미사일 방어 : 현황과 한국의 선택. 국제정치논총. 50(5), 151-164.
- 김종대. 2016. 제임스 시링과 공식 보고서, 어느 쪽이 진실일까. 한겨레(8. 13.).
- 김창수. 2016. 사드, 서울은 못 지키고 도쿄는 지키는. 한겨레(8. 16.).
- 김태우. 2015. 사드(THAAD) 배치와 한미 및 한중관계 전망. Jpi정책포럼 2015-10.
- 김홍규. 2014. 싸드(THAAD)의 한반도 도입. 성균차이나 프리프 2(4), 84-91.
- 노효동. 2016. 미국무부 한국과장 "중국, 사드 설명 들으려고 하지 않아." 연합뉴스(4. 19.).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9/0200000000AKR20160419006200071.HTML> (검색일: 2016. 5. 3.).
- 박근재. 2016.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정책적 함의. 전략연구 23(1), 37-66.
- 박종철. 2016.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의 재조명. Online Series, CO 16-18, 통일연구원 (5. 27.).
- 박지현. 2015.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한·미·일 방어체제, 감시의 ‘눈’은 이미 작동 중이었다. 월간 중앙(2015. 05.). 출처: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05867> (검색일: 2016. 5. 3.).
- 블라이트, 제임스 G. · 재닛 M. 랭. 박수민 역. 2014. 아마겟돈 레터: 인류를 핵전쟁에서 구해낸 43통의 편지. 시그마북스.
- 성연철. 2015. 중국의 10월 10일 딜레마. 한겨레(10. 2.).
- 성연철. 2016. 중국, '북 기어코 쏘겠다면 제지 못해.' 한겨레(2. 3.). 출처: <http://www.hani.co.kr/arti/PRINT/729286.html> (검색일: 2016. 2. 17.).
- 송민순. 2016. 비핵화 해법, 중국이 외교역량을 발휘할 때다. 한겨레(8. 8.).

- 윤정원. 2016. 북핵 위협의 실태와 우리의 대응 방안. 세계의 주요 갈등·분쟁의 실태 및 쟁점. 2016년 화랑대연구소 군사연구 세미나. 육군사관학교 충무관(3. 25.).
- 이귀원. 2016. 한중 '사드갈등' 추귀홍 변수로 격화... '대사 조치' 강수. 연합뉴스(2. 24.).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4/0200000000AKR20160224101551014.HTML> (검색일: 2016. 6. 2.).
- 이기완. 2015. 사드와 AIIB를 둘러싼 미중관계와 한국. 국제정치연구 18(1), 331-346.
- 이대식. 2015. 유럽 미사일 방어망을 둘러싼 미리 갈등 분석. 러시아연구 25(2), 181-202.
- 이상현·정재홍. 2016.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인식과 한국의 대응. 정책브리핑 2016-18(8. 12.).
- 이정진. 2016. 中, '사드반대' 재표명...한미 국방회담선 사드 논의안해. 연합뉴스(6. 4.) 출처: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6/06/04/0603000000AKR20160604055700014.HTML> (검색일: 2016. 6. 4.).
- 이제훈·김외훈. 2016. 시진핑, 중국식 병진전략 구사...핵문제 해결-관계 강화 병행. 한겨레(6. 3.).
- 이태훈. 2007. 폴란드·체코 MD 구축 땀 공격할 수도. 조선일보(2. 21.).
- 정경영. 2015. THAAD 배치 논란과 한국의 안보. 군사논단 81, 48-75.
- 정제윤. 2016. 사드의 본질은..북핵 해결 중국 압박용? JTBC(8. 16.).
- 차창훈. 2012.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김계동 외. 한미 관계론. 명인문화사.
- 최종건. 2016. 사드가 MD가 아니라면. 한겨레(7. 27.).
-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2016.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KINU 통일나침반 16-05. 통일연구원.
- 평화연구원. 2016. '북핵포기'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현안진단 148(8. 16.).
- 홍규덕. 2015.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주요쟁점과 미사일방어(MD) 전략. 신아세아 22(4), 110-134.
- 홍제성. 2016. 中, 4월 대북수입 22.3% 감소...대북제재 효과 가시화. 연합뉴스(5. 24.).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4/0200000000AKR20160524079453083.HTML> (검색일: 2016. 6. 2.).
- 홍제성·이준삼. 2016a. 시진핑, 북 리수용에 '냉정·자제...평화·안정 수호해야. 연합뉴스(6. 1.). 출처: <http://www.yonhapnews.co.kr/northkorea/2016/06/01/1801000000AKR20160601183552083.HTML> (검색일: 2016. 6. 1.).
- 홍제성·이준삼. 2016b. 中, 'G7 남중국해 성명'에 발끈...“강렬한 불만...중국을 모함말라.” 연합뉴스(5. 27.).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7/>

- 0200000000AKR20160527157351083.HTML?from=search (검색일: 2016. 6. 2.).
- Armstrong, Ian. 2016. Why the U.S.-South Korea Missile Shield Could Provoke China to Develop Advanced Weaponry. WORLDPOST(08. 16.) 출처: http://www.huffingtonpost.com/ian-armstrong/us-korea-missile_b_11532232.html (검색일: 2016. 8. 20.).
 - Borger, Julian. 2016. China to send nuclear-armed submarines into Pacific amid tensions with US. The Guardian(26 May). 출처: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6/may/26/china-send-nuclear-armed-submarines-into-pacific-us> (검색일: 2016. 5. 29.).
 - Armstrong, Ian. 2016. Why the U.S.-South Korea Missile Shield Could Provoke China to Develop Advanced Weaponry. WORLD POST(08. 16.). 출처: http://www.huffingtonpost.com/ian-armstrong/us-korea-missile_b_11532232.html (검색일: 2016. 8. 20.).
 - Chan, Minnie. 2016. Beijing ready to impose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in South China Sea pending US moves. South China Morning Post(01 June). 출처: <http://www.scmp.com/news/china/article/1960954/beijing-ready-impose-air-defence-identification-zone-south-china-sea> (검색일: 2016. 6. 1).
 - Heath, Timothy R. 2016. How China's New Russian Air Defense System Could Change Asia. War on the Rocks(January 21). 출처: <http://warontherocks.com/2016/01/how-chinas-new-russian-air-defense-system-could-change-asia/> (검색일: 2016. 7.20).
 - Hwang, Jaeho. 2015. The Rise of a New Regional Order and South Korea's Deepening Strategic Dilemm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7(2), 263-275.
 - Lee, Sangkeun. 2015. Is the Deployment of THAAD in South Korea a Right Choice?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5(1), 109-116.
 - Liu, Chong. 2015. An Analysis of US Motives Behind THAAD Deployment in South Korea.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25(4).
 -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15. 2015 Report to Congress of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 Wilkening, Dean A. 2012. Does Missile Defence in Europe Threaten Russia? Survival: Global Politics and Strategy 54(1), 31-52.
 - Zhang Yi. 2016. Strike deployment against THAAD must be planned. Global

- Times(2016. 7. 29.). 출처: <http://www.globaltimes.cn/content/997148.shtml> (검색일: 2016. 8. 5).
- 马尧. 2016. 韩国,你再搞 ‘海上萨德’ 也玩不转吧. 环球网(08. 19.). 출처: http://opinion.huanqiu.com/opinion_world/2016-08/9331497.html (검색일: 2016. 8.20.).
 - 石源華·文恩熙. 2012. 試論中韓戰略合作伙伴關係中的美國因素. 東北亞論壇 5.
 - 杨依军. 2016. 王毅: 实现半岛无核化与半岛停和机制转换并行推进. 新华网(2. 17.). 출처: http://news.xinhuanet.com/world/2016-02/17/c_1118075383.htm (검색일: 2016. 6. 4.).
 - 王经国·张宝印. 2016. 习近平: 坚持人民防空为人民 开创人民防空事业新局面. 中國共產黨新聞網(5. 13.). 출처: <http://cpc.people.com.cn/n1/2016/0513/c64094-28349816.html> (검색일: 2016. 5. 15.).
 - 王俊生. 2016. 新时期发展中韩安全合作的意义-障碍与方向. 东北亚学刊 1, 006.
 - 郑继永. 2015. 中国对部署THAAD系统的几个逻辑. JPI PeaceNet 2015-17(4. 23.).
 - 曹世功. 2015.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는 중국에게 위협이 안되는가? JPI PeaceNet 2015-16(4. 15.).
- 중앙일보
 - The Wall street Journal
 - 人民网
 - 环球时报

● 투고일: 2016. 8. 3. ● 심사일: 2016. 8. 5. ● 게재확정일: 2016. 8. 11.

Deploying THAAD in South Korea and China's corresponding strategy

Nah, Youngju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From the early stage of the debate about THAAD has China expressed clear opposition to deploying THAAD in South Korea. China has had the perception that deploying THAAD in Korea is related with the purpose of U.S.'s containing China, and that THAAD is a strategic resource beyond the demands of the strategic balance of the Korean peninsula. When such a THAAD controversy at Korea was changed to public consultation with U.S. on THAAD after North Korea's fourth nuclear test, China advocated the simultaneous implement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eace regime on Korean peninsula, and was actively participating in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unlike the past. A series of China's corresponding action could be explained as an alibi diplomatic strategy to block disadvantage to China.

Since decision on deploying THAAD China has implemented economic retaliatory measures against South Korea and will be expected to retaliate by non-tariff barriers and nationalism in trade sphere. Despite the deterioration of South Korea -China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on deploying THAAD China has continued to insist on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t deviated from the sanction regime against North Korea. It can be seen as China's dilemma situation on Korean peninsula management policy. As China recognize that THAAD can undermine the regional strategic balance, China will prepare a corresponding diplomatic and military measures for recovering it. It can be anticipated that China's corresponding strategy will be as follows : a regional arms buildup, the declaration of West S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strengthening strateg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nd Russia, etc.

<Key words> THAAD, strategic balance, missile defence,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r, peace regime on Korean Peninsular